

# “왜곡·부정 반복, 상처만 남겨...이젠 매듭지어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② 끝나지 않은 오월

1980년 5월의 광주는 국가폭력 앞에 쓰러졌지만 끝내 침묵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총칼에 맞서 서로를 지키려 했고, 진실을 기록하며 역사를 증언했다. 그러나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은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왜곡과 부정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법적 평가를 모두 마친 사건이다.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피해 보상,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이어졌고,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그럼에도 왜곡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이미 허위로 결론 난 주장들도 형태만 바꾼 채 끈질기게 되살아난다. 문제는 이런 왜곡이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국가 조사와 사법 판단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역사임에도 광주는 끊임없이 다시 증명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상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왜곡에 맞서 기록으로 대응해왔다. 국립5·18민주묘지외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각종 증언집과 조사보고서는 그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학생들이 묘역을 둘러보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사법 판단·국가조사 결과에도 진실 호도 세력 등장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 미완의 과제 해결 노력도

날의 진실을 축적해온 결과물이다. 최근에는 계엄군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정황 등을 재확인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와 진실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록만으로 왜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곡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역사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도 왜곡 논란은 반복됐다. 극우 성향 유튜브인 전한길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5·18 다시 평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

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북한에서 실제로 사람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 언론사는 지난해 5·18 북한군 투입설 등 허위보도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영상을 삭제한 뒤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 근거

가 결여돼 있으며, 제시된 근거 역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만원씨 역시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럼에도 인터넷과 SNS에는 여전히 ‘5·18 내란 폭동’,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인 이유’ 등의 왜곡 게시물과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왜곡 대응만이 아니다. 46년이 흐른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다.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의 안락장 장소로 지목된 광주 북구 효령동 일대에서 발굴 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5·18기념재단은 13일 광주 북구 효령동 산 143 일대에서 개토제를 열고 8일간 시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안락장이 의심되는 약 1000㎡ 규모 부지다. 재단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이 일대를 행방불명자 안락장 추정지로 특정했다.

과거 공동묘지였던 효령동 일대는 이미 두 차례 발굴이 진행됐지만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으나 감시 결과 5·18과 무관한 무연고자 유해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발굴은 계속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5월은 여전히 현재의 시간이다. 왜곡과 부정에 맞서 진실을 지켜내는 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의 흔적을 찾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까지.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미 허위로 확인된 주장을 반복 유통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이라며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5:31 달맞이 02:55  
맑음 19:28 달맞이 15:28



광주	☀️	13~26
목포	☀️	13~22
여수	☀️	12~21
순천	☀️	13~24
구례	☀️	12~26
광주	☀️	12~26
신도	☀️	13~22
흑산도	☀️	12~20
고흥	☀️	12~23
진도	☀️	13~20

미세먼지  
확산중  
PM10 10:56 / 23:38  
PM2.5 04:15 / 16:46  
여수  
PM10 06:16 / 18:44  
PM2.5 12:26 / --:--

## 불법 선거운동 한 목사

마틴필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현장에 나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70대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5월29일 광주 동구 금남로 집회 현장에서 확산 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약 15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A씨는 2022년도에도 예매 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5년간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전남도교육청 이종언어 교육 활성화

### 강사 280명 인력풀 구축

전남도교육청이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이종언어강사 280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이종언어교육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번 인력풀은 전남교육청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이종언어 연수 과정을 이수한 강사들로 구성됐다. 베트남어 강사가 약 90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어·필리핀어·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권 인력도 포함됐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이종언어 클래스랩과 AI 이종언어 학생 연구 동아리, 이종언어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력풀

구축을 통해 학교별 수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며 한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이 가정 내 의사소통을 돕고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종언어강사를 단순 수업 지원 인력을 넘어 학부모 상담 통역, 학교생활 안내, 초기 적응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교육지원 인력으로 활용 방침이다.

강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에는 전문가 과정 연수를 통해 수업 운영과 현장 실습을 지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광주시교육청, 돌봄 사각지대 해소한다

### 올해 거점형 돌봄기관 31곳 지정...두 배 '깡통' 아침·저녁·토요일·휴일 등 상시돌봄체계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31곳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교육부 유보통합 사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지정해 아침·저녁, 토요일·휴일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운영 유형은 △출퇴근 시간대 돌봄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말과 공휴일 돌봄을 담당하는 ‘토·요·휴일형’ △연중 상시 돌봄 체계를 갖춘 ‘365형’ 등으로 구분된다.

시교육청은 단순 보육을 넘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독서 활동,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365형 거점형 돌봄기관들이 연합해 유아 41명이 참여한 ‘딸기 따기 체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움을 원하는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 누리집 자료마당 내 유초등교육과 공개자료실에서 지정 기관 명단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거점형 돌봄기관은 필요한 시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성장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돌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포럼

# “통합특별시, 광주·전남 청년 연령·정책도 통합해야”

### 문연희 연구위원, 정책 체계 구체화...기본계획 수립도 임명규 대표, 예산 효율화·거버넌스 모델 발굴 등 강조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청년 연령 기준과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광주청년센터는 12일 광주 동구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통합특별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청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청년 연령 기준이 달라 지역 정책 대상 규모와 수요 분석, 실태 조사 방식까지 달라진다”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는 청년 연령을 19~3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남은 18~45세까지 인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광주청년센터는 12일 광주 동구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통합특별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청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는 도시형 일자리와 중앙정부 연계 사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연령 폭이 좁고, 전남은 농어촌 지역 특성과 인

구 감소·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해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문 연구위원은 “연령 기준 차이는 청년 인구 규모 산정과 생애이행 단계 구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청년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긴 청년 관련 특례를 기본계획과 재원 체계로 연결할 수 도권 수준의 고용·주거·교통·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산업과 연계한 청년 성장 사다리 구축, 주거·교통·문화 결합된 정착 생활권 조성,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등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이 ‘공동 책임 주체’로 참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광주가 다양한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순수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57%에 달했다”며 “단순 취업 지원을 넘어 주거·복지·문화까지 연결된 생애주기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회성 취업 특강과 행사 중심 사업을 통합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장기 근속 인센티브 등 실질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 주도의 연령 기준 공론화와 광주·전남 청년 거버넌스 결합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환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백경호 전남대 경제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 권리와 노동, 일자리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대진 광주청년센터장은 “행정통합이라는 변화 속에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